‘읍참마속?’…칼 끝에 선 박선숙

김수민·왕주현과 함께
기소땐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 의총 징계수위 결론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운데)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한 입장발표 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당장 징계를 미루고 해당 의원이 기소될 경우에 당원권을 정지키로 한 것이다.

안 공동대표는 28일 긴급 의원총회 이후 “책임자이자 대표자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실행에 옮기고 관련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더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고 했지만, 다수의 지도부와 의원이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원칙은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사건 초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전날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핵심 당사자가 구속되자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와 오전 8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의혹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후 다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된다는 의견과 국민정서에 따라 출당 등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 중 일부는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안철수 대표가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의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갈 때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책임론 등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결국, 하루 종일 해당 의원의 처리를 놓고 출당 등까지 거론하며 갑론을박을 했지만 당헌당규에 나와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당헌당규대로 처리할 것을 무슨 큰 결단을 내릴 것처럼 소란만 피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 관계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왕 부총장이 처음이다. 또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28일 오전 2시45분께 귀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호남 의원들 ‘부글부글’

지지율 더민주에 역전…대선 앞 ‘호남 주도 정권 창출론’ 흔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 파문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호남 의원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호남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호남 주도 정권 창출론’을 주도했던 호남 중진들도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진 않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생각이 깊어지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역 민심의 흐름이다.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추격을 받았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근 리베이트 파문 이후, 역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공동하락하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조기에 반전시키지 못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 ‘지도부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지도부 대체가 쉽지 않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지만 대선 주자로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기에 조기 전당대회도 당원 및 지역위원회 미비 등으로 치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당내 분열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연말께 정계개편 가능성마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당 호남 세력과 더민주의 비노 진영, 새누리당 비박 진영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에 따라 국민의당의 미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판단력과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국민의당 사태 난감하네”

역풍 불까 비판도 옹호도 어려워…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거부

대여 공조 타격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 수사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함께 ‘거야(巨野)’ 진영을 구축해야 할 국민의당과 공조에 나서야 하지만 불법 의혹에 휘말린 국민의당의 편을 들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더민주는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는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에 대해선 논평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 야권공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공조를 한다면 ‘제 식구 지키기’라는 비난에 처할 수 있다. 더민주가 단독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하더라도 국민의당을 같은 야권으로서 비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이 제안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자칫 7월 임시국회를 소집에 더민주가 동의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위한 ‘방탄국회’에 협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도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민심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과의 공조마저 흔들리면서 거대 야권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박영선 국회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창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창립식을 열었다.

이 모임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단체로 20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을 포함, 더민주 기동민·김두관·김부겸·김성수·문희상·민병두·박범계·변재일·윤후덕·이개호·이춘석·진영·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이상돈 의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국경제와 20대 국회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야권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제시되고, 공정성장도 모델로 추가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성과가 지속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라며 “이 정책들은 지금보다는 나은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을 작동시키는 본질적 변화는 동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승민 ‘불출마’…최경환 ‘장고’

새누리 전대 모드…이주영·이정현 등 친박계 후보 난립 가능성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인 최경환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자칫 거물급이 빠진 대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출마 여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지만, 유승민 의원은 전대에 나오지 않는 쪽에 기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의원은 최근 정병국 의원에게 전대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며, 전날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위의 당권 도전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 의원은 탈당, 무소속 당선, 복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체급’이 올라간 데다 복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친박계에서 존재감이 큰 4선의 최경환 의원이다. 당내에선 최 의원이 전대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고, 출마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읽히면서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5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이정현 의원의 당권 도전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친박계 당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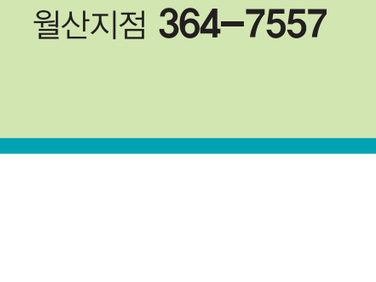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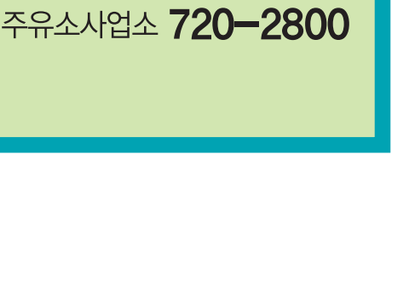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